

[퇴직연금 가입자교육]

DC

확정기여형

| 기업형IRP |



1 퇴직연금제도

기업은 퇴직급여 재원을 사외 금융기관(퇴직연금사업자)에 적립하고, 근로자 퇴직시 적립된 퇴직급여를 근로자 선택에 따라 일시금 또는 연금으로 수령하는 제도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DB)

근로자의 퇴직금은 퇴직직전 3개월 평균임금에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으로 결정됨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DC)

기업은 정해진 부담금에 따라 부담금을 납부하며, 근로자의 운용성과에 따라 달라짐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

근로자가 퇴직시 수령한 퇴직급여를 은퇴시점까지 적립·운용하여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수령함

퇴직연금제도별 특징 및 차이점

구분	확정급여형(DB)	확정기여형(DC) /기업형IRP	개인형IRP
급여액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근속연수	연간임금총액의 1/12 이상 ± 운용수익(손실)	퇴직급여 일시금 ± 운용수익(손실)
적립금 운용주체	기업	가입자	가입자
가입자 추가납입	불가	가능 (연금계좌 납입액과 합산하여 연 1,800만원 한도)	
중도인출	불가	가능(법정사유 충족시)	
수령방법	개인형IRP로 퇴직급여 이전		연금 또는 일시금
수령요건	연 금 : 만 55세 이상 및 연금수령기간 5년 이상 일시금 : 일시금 요청하거나 연금수급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 기업형IRP : 10인 미만 기업이 근로자의 개인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경우

※ 가입자 추가납입은 연 최대 700만원 한도 세액공제 가능(전 금융기관 연금저축계좌 합산)

2 중도인출 및 담보대출

DC/IRP에 한하여, 법이 정한 중도인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중도인출 가능

중도인출 사유 (근퇴법 시행령 제2조 1항)



무주택자 본인명의 주택구입

제출서류

주택구입증빙서류(부동산 매매(분양)계약서, 건축설계서 및 공사계약서)
현거주지 주민등록등본, 현거주지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관리대장,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무주택자 주거목적 전세금 및 임차보증금

(한 회사에 근무하는 동안 1회 한정)

제출서류

전세 및 임대차계약서 사본, 현거주지 주민등록등본, 현거주지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관리대장,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가입자, 배우자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이 6개월 이상 요양을 하는 경우

제출서류

6개월 이상의 치료기간 및 병명 기재된 의사 진단서(소견서) 또는 국민건강
보험공단 발급한 장기요양확인서(배우자 및 부양가족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가입자가 회생절차 개시 결정 및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신청일로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 신청)

제출서류 법원의 회생개시 결정문 또는 파산선고 결정문



천재지변 등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사유와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제출서류 지방자치단체 발급한 피해사실확인서 또는 자연재난피해신고서

※ 중도인출시 적용세율

퇴직금은 퇴직소득세, 개인부담금+운용수익은 기타소득세(16.5%)로 과세

법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담보 제공 가능
(근퇴법 시행령 제2조)

※ 관련법(임금채권법 등)에서는 여전히 담보가 불가한 것으로 규정 및 예상수급액의 변경 등의
사유로 실질적인 담보인정이 어려워 현재 담보대출 시행되고 있지 않음 (2016.1.1기준)

3 임금

기업이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

평균임금

- 산정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간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

평균임금 산정 시 포함되는 항목

- 정기적/고정적으로 지급하는 금품(기본급, 직무수당, 자격수당 등)
- 추가 근무에 따라 지급하는 금품(야간수당, 휴일수당 등)
- 연차미사용 관련 금품(연차수당 등)
- 상여금(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고정 상여금 및 취업규칙 등에 의거 개인성과 평가에 따라 지급되는 상여금)

평균임금 산정 시 포함되는 않는 항목

- 일시적/불확정적으로 지급하는 금품(경영성과급, 경영인센티브 등)
- 실비변상적 금품(출장비, 여비 등)
- 복리후생적 금품(기업의 복지시설물 이용, 학자금 등)

4 퇴직급여 지급절차

근로자 퇴직 시, 퇴직금은 개인형IRP로 이전됨(근로자 본인이 원하는 금융기관에서 IRP계좌를 개설 후 회사에 퇴직신청)



※ 개인형IRP 이전 예외사유

가입자가 만 55세 이후 퇴직하는 경우, 퇴직급여액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
근로법 제7조 제2항에 따라 급여를 담보로 대출받은 금액 등을 상환하기 위한 경우

IRP 이전시 효과

- 절세효과** IRP를 통한 연금수령시 저율의 연금소득세 적용
- 과세이연효과** 퇴직소득세 및 운용수익의 원천징수 시기를 IRP인출 시점으로 이연함으로써 투자원금 증가
- 자산관리효과** IRP내에서 다양한 상품운용 가능

개인형IRP로의 이전 후 적립금 운용방법 및 상품

- 개인형IRP에 납입된 퇴직급여 및 개인추가납입금으로 정기예금, 수익 증권(펀드) 등의 금융상품에 투자하여 운용
- 운용상품 및 투자비용은 가입자가 직접 결정하며 그 운용결과는 가입자에게 귀속됨

5 개인형퇴직연금(IRP) ⇔ 연금저축 계좌이체

소득세법에 따라 세액공제나 과세이연 등의 세제혜택을 유지하면서 다른 연금계좌로 이체하는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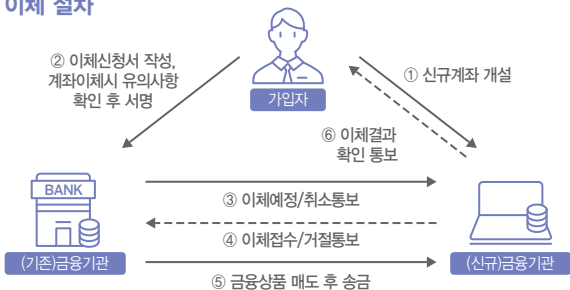
이체 대상

- 만 55세 이상인 자
 - 연금계좌의 가입일로부터 5년 경과 후
(단, 이연퇴직소득이 이체하는 연금계좌에 있는 경우 5년 미경과시에도 허용)
- ⇒ 상기 조건을 모두 갖춘 가입자가 전액을 이체하는 경우

이체 효과

- 퇴직·개인연금 간 유기적 연계를 통한 통합적 자산운용 가능
- 퇴직소득세 과세이연 등 기존 세제혜택 유지

이체 절차



※ 2013년 3월 1일 기준으로 기가입한 연금저축계좌 및 IRP의 구분에 따른 세부적인 이체가능 대상 및 과세적용 등 자세한 사항은 영업점 문의바람

6 연금소득세, 퇴직소득세 등 과세체계

※ 지방소득세 포함

재원	일시금수령	연금수령
퇴직금	퇴직소득세	연금소득세 (이연퇴직소득세×70%)
개인부담금+운용수익	기타소득세(16.5%)	연금소득세(5.5~3.3%)

- ※ 개인부담금 中 세액(소득)공제를 받지 않은 금액은 과세제외
- ※ 부득이한 사유(사망, 파산, 해외이주, 장기요양 등)로 해지 시, 연금수령에 준해 과세됨
- ※ 연금수령시 인출순서 : 과세제외금액 → 퇴직금 → 기타(세액공제분 및 운용수익)
- ※ 연간 연금수령 가능한도 = {과세개시일 현재 연금계좌의 평가액/(11-연금수령연차)}*120%
연간수령한도 범위 내 수령시 연금수령으로 인정 및 한도초과분은 일시금(연금외) 수령시 세율 적용됨
- ※ '개인부담금+운용수익'으로 연금수령 시, 사적연금소득이 연간 1,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소득합산신고 대상임

7 퇴직연금제도의 중단 또는 폐지

제도 중단

재정압박 등의 이유로 퇴직연금제도가 중단되는 경우에도 가입자의 개인부담금 납입, 급여지급, 적립금 운용, 적립금 운용현황 통지 및 가입자교육 등은 계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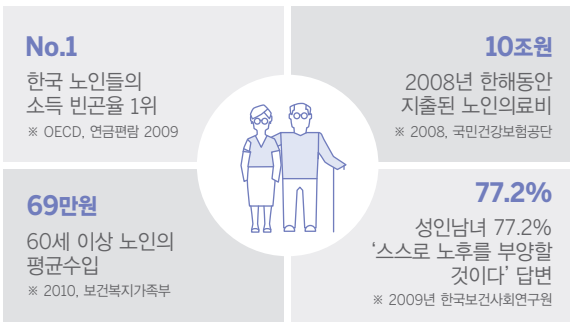
제도 폐지

노사합의에 의해 폐지하는 경우, 적립금은 가입자의 개인형IRP로 이전하고, 해당 자금의 이전은 퇴직급여를 중간 정산하여 지급한 것으로 간주

※ 중단 또는 폐지에 해당하는 기간은 사내퇴직금 제도를 적용함

8 노후설계의 중요성

한국 노인들의 현주소



노후 대책의 필요성 증가

- 노후생활의 가장 어려운 문제 1위는 경제적 어려움
- 노후자금 확보의 필요성은 증가하지만 직장인의 45%는 노후 대책 미흡

[65세 이상 고령자가 현재 일을 하는 이유]



■ 생활비마련 79.3% ■ 용돈마련 8.6% ■ 건강유지 3.1% ■ 기타 9.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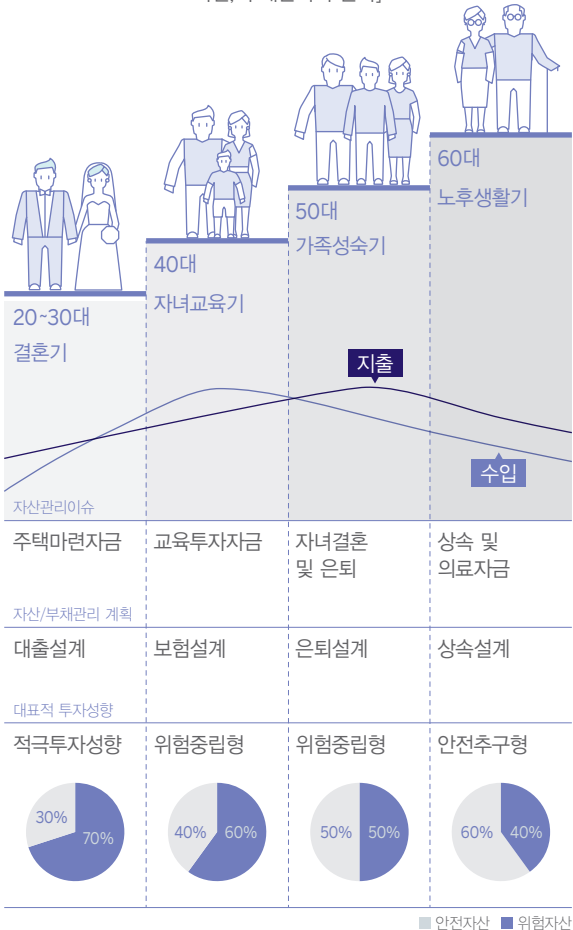
※ 「2014년도 노인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4

5층 복지제도 구축필요



생애주기에 따른 재무 설계 필요

[가입자의 소득, 자산, 부채, 나이 및 근속연수 등을 고려한
자산, 부채관리의 원칙]



9 수급권 보호

- 퇴직연금제도의 급여 받을 권리는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음 (근퇴법 제7조)
- 근로자의 퇴직금을 미리 금융기관에 사외예치함으로써, 회사의 경영 실적과 관계없이 근로자가 퇴직금을 받을 권리를 보호

10 계약이전

기존의 퇴직연금사업자(운용관리기관 및 자산관리기관)를 변경하여 퇴직연금계약을 타 사업자로 이전 가능

근로자 동의	계약이전에 관한 근로자 대표의 동의 또는 의견청취
규약변경	지방 노동관서장에게 퇴직연금사업자 변경에 관한 규약변경 신고 및 수리
계약이전 신청	새로운 운용관리기관/자산관리기관과의 계약체결 및 계약이전 신청
가입자정보 및 적립금	새로운 운용관리기관으로 가입자정보 이전 새로운 자산관리기관으로 적립금 이전
퇴직연금 제도 운영	새로운 퇴직연금사업자가 퇴직연금제도 운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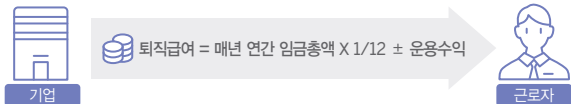
※ 기업형IRP는 근로자의 동의만 필요하고 규약변경의 절차를 거치지 않으며, 개인형IRP는 근로자의 동의, 규약 변경 절차를 모두 거치지 않음

11 기업의 도산

- 기업의 폐업 및 도산 등에 따라 기업을 통해 퇴직연금을 청구할 수 없는 경우, 근로자가 '폐업사실확인서'등의 '퇴직확인서류'를 지참하여 직접 퇴직연금사업자에 지급 청구 가능
- 퇴직연금사업자가 기업의 도산사실을 알게 된 경우 개별가입자에 대하여 서면 등을 통해 추가 안내함

12 사용자의 부담금

부담금 수준



부담금 납입시기 월납, 분기납, 반기납, 연납으로 선택 가능

부담금 납입현황 퇴직연금사업자의 인터넷뱅킹 또는 매월 운용현황 보고서(E-MAIL), 가까운 영업점 방문 통한 확인

부담금 납입지연(근퇴법 시행령 제 11조)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및 기업형 IRP를 도입한 사업장은 퇴직연금 규약 및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가입자에 대한 퇴직연금 부담금을 정기적으로 납입하여야하나, 만약 납입이 지연되는 경우에는 지연일에 따라 법이 정하는 지연이자를 납입하여야 함

지연이자 이율

- 정기납입일(또는 합의된 납입일) 다음 날을 기산일로 하여 가입자의 퇴직급여를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 연 10%
- 퇴직 후 14일의 다음 날부터 부담금을 납입하는 날까지 : 연 20%

※ 지연이자 적용제외사유

- 임금 및 퇴직급여를 지급할 자금이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
- 파산선고, 회생절차개시 결정, 그리고 고용노동부장관이 도산 등의 사실을 인정한 경우
- 지급이 지연되고 있는 임금 및 퇴직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의 존부를 법원이나 노동위원회에서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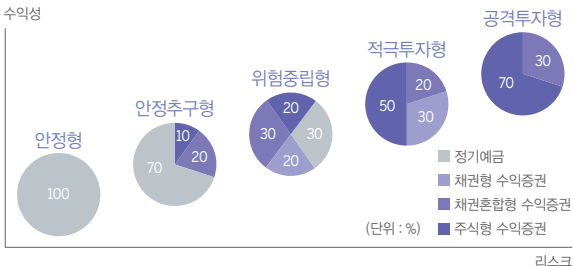
13 안정적 투자원칙

자산배분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일련의 투자과정

자산구성비율

투자자의 투자성향에 영향을 받으며, 일반적으로 안정형, 안정추구형, 위험중립형, 적극투자형, 공격투자형으로 구분



장기투자

- 자산운용의 전략을 세우고 장기간에 걸쳐 지속적으로 투자하는 방법
- 전체적인 큰 흐름을 보면서 투자하기에 장기간 운용되는 퇴직연금제도에 적합함

분산투자

- 하나의 자산에 집중투자하지 않고 대상별, 종목별, 지역별, 시기별로 분산하여 투자위험을 줄이는 투자방법
- 투자에 따른 위험을 분산하게 되어 궁극적으로 안정적인 자산운용을 할 수 있음

14 수익구조 및 투자위험

위험 RISK

- 투자의 성과가 예측과 달리 벗어나는 것
- 기대수익 달성에 대한 불확실성

수익 RETURN

- 투자의 성과
- High Risk, High Return, Low Risk, Low Return (위험이 크면 그에 따른 수익이 크고, 위험이 적으면 그만큼 수익도 적음)

15 표준형DC제도

표준규약 및 표준계약서를 활용하여, 둘 이상의 사용자가 하나의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는 형태로, 퇴직연금사업자가 마련한 표준규약에 중소기업의 기업들이 가입함으로써 가입절차 및 제도운용이 편리함

표준형 규약에 규정될 사항

- 표준규약으로 설정되는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의 특성과 이를 반영한 명칭
- 가입대상 사업의 범위 또는 특성에 관한 사항
- 적립금 운용방법 및 그 선정기준. 이 경우 가입자가 운용지시를 하지 않는 경우의 운용방법 및 그 선정기준을 포함함
- 탈퇴할 수 있는 사유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 수수료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둘 이상의 사용자가 참여하는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의 합리적 운영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표준형 계약에 규정될 사항

- 법 제 23조 제 1호에 따른 표준규약의 이행에 관한 사항
- 둘 이상의 사용자가 참여하는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의 운영과 관련한 비용 산출 및 부담에 관한 사항
- 운용관리업무와 자산관리업무의 계약 해지·변경의 사유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가입자의 수급권 보장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퇴직연금 전용고객센터 1599-1000
가입자교육 전용홈페이지 www.woorirps.com
우리은행 홈페이지 www.wooribank.com

더 많은 정보가 필요하시면 가까운 우리은행 영업점이나 전용고객센터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